

민선 6기 광주·전남 첫 시·도정 질의

“市, 도로관리비 등 수십억 區에 떠넘겨”

문상필·김동찬 시의원 비판

지하철 2호선 건설 여부

윤장현 시장 “연내 결정”



문상필 시의원



김동찬 시의원

광주시의회는 15일 제233회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를 상대로 이틀째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시·자치구 간 불합리한 행정개선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시·자치구 간 불합리한 행정 질타 =광주시가 도로와 가로등 관리 등 각종 사업을 자치구에 위임해놓고 정작 예산은 구정에 떠넘겨 가뜰이나 어려운 자치구에 재정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새정치·북구 3) 의원은 이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 등의 취지에 따라 시 사무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지만, 관련 경비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108km에 달한 도로 관리의 경우 올해 시 지원액은 24억원에 불과한 반면 자치구는 이보다 배

가까운 44억원을 떠안았다.

도로 관리비 떠넘기기는 2012년 46억원, 지난해 45억원 등 수년간 이뤄져 왔다.

또 무려 323개 구간에 달하는 제설비용도 지난해 기준 시는 23%인 2억4000여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억여원은 자치구에 떠넘겼다.

보도 유지 관리비도 자치구가 부담한 액수는 올해 9억원을 비롯해 지난해와 2012년에는 10억원, 17억원에 달했다. 가로등과 보안등 조명시설(8만7000여개)에 들어간 전기료(66억원)는 아예 자치구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는 위임 사무 비용을 시도가 부담하게 돼 있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으로 시·구간 상생이 아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사업비 전액을 자치구에 지원,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폭 20m

이상 도로의 보도관리, 제설작업, 가로 등 유지관리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크다”고 해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올해 결정 =민선 6기 들어 윤장현 광주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 김동찬(새정치·북구 5)의원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재정상태 등 다양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린 뒤 TV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윤 시장은 “일부에서는 시 입장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아직까지 2호선 건설여부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TF팀에는 미건설, 노면 구간 확대 등 보안 건설, 원안 건설 등 3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광산구와 북구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원안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김 의원의 애초대로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F1 대회 2016년 재개 의향 없나”

고경석·김욱기 도의원

혁신도시에 국제고 설립

장만채 “市 추진엔 가능”



고경석 도의원



김욱기 도의원



우승희 도의원

의회와 조율없이 방송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도정 질문을 앞두고 요지를 제출했다니 전남도 관계자가 전화해 답변자를 실국장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

15일 전남도의회 민선 6기 첫 도정질문에서는 광주·전남도 상생협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관련 의회와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원 3명 F1 관련 질의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F1 재개 여부를 묻는 고경석(새정치·목포3) 의원의 질문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재개 여부는 적자구조 개선이 큰 숙제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전임 도지사 시절 F1대회가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스폰서십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SOC 확충이나 정치적 환경 등 외부환경 변화가 뚜렷한만큼 2016년 F1대회를 재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현 단계에서 F1대회를 지속하려면 적자구조 개선이 큰 숙제이고, 중단하려면 운영사 측과의 분담이 우려된다”며 2016년 대회 재개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F1대회를 둘러싸고 외부 환경변화가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

이지만 4차대 대회를 개최하는 동안 큰 힘이 됐던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피로감이 어느정도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대회 개최 여부는 내년 여름까지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경시 지적 =민선 6기 출범 이후 이 지사가 주요 현안을 도의회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욱기(무소속·나주2)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내, 어느 누구보다 도의회와 의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취임 100일이 되도록 3차례나 의회에 실수했다”며 “이취임식과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광주전남상생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승희(새정치·영암1) 의원은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나 KTX 노선도

기도 하는 등 집행부가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질책했다.

이낙연 지사는 이에 대해 “도정질문 답변자를 지정하려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 국제고 설립 추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나주시가 지원하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김욱기 의원의 질문에 “전임 나주시장이 국제고 설립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재선에 실패하면서 (약속 준수)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국제고가 성공하려면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비가 있어야 한다”며 “나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chadol@kwangju.co.kr



‘비정규직 노동권 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간접고용 근절지침 및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가이드 라인’ 적용 등을 광주시에 제언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축산식품유통공사 설립 시급

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지적

전남의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남축산식품유통공사(가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산 전문 CEO 영입을 통해 전남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을 통합하고, 지난해 농식품부 축산가공분야 특화농공단지로 선정된 함평 명암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호남권 통합 축산가공 전문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선임연구위원과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은 지자체 주도 축산 유통사업화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유통사업 진출 동향을 분석하고, 전남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내 10만 축산농가 보호 및 축산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남도 축산식품유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공기업인 ‘전남도 축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 등은 또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와 유통센터 유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 지역기업 간 협상 및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실장은 “한·중·한·호주 FTA 등 축산 선진국과의 교역 확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단단계 유통과정으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과 함께 높은 시장 가격에도 지역농가의 소득 보전이 어렵다”며 “지자체 주도의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일기자chadol@kwangju.co.kr

정부 “고위급회담 30일 열자”

어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지난 13일 대북 전문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측은 이날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

준법감시심의제(인제14001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버전용 무배당 **SH 실버암공제**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 ✓ 나이가 많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없으셨던 분
- ✓ 고혈압 및 당뇨 때문에 보험 가입 못하셨던 분
- ✓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바라는 모든 자녀분
- ✓ 자식에게 암 치료 등으로 부담주기 싫으신 분
- ✓ 기존 암보험이 있으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

Sh 수협보험